

박준영 전격 사퇴...與 “최소 1명 정리” 건의 靑 수용했나

與 초선 “최소 1명은 부적격”...재선 그룹 힘 실어

朴의장 “국민 뜻 부합한 결론” 與 “대통령께 전달”

13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적인 사퇴는 결국 청와대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부적격 논란이 제기된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 3인방 중 최소 1명 이상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 논의에는 초선 40여명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

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세 후보자를 두둔한 데다가, 오는 14일까지로 기한을 두고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세 후보자 모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당초 일부 후보자 낙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민주당 지도부가 갑갑 질판하는 모습을 보이자, 초선의원들이 공개리에 ‘1명 이상 정리’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재선 의원급에서도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송영길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며 낙마 쪽에 힘을 실었다.

이에 송영길 지도부도 청와대에 세 후보자를 모두 안고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누구를 지목해서 낙마시키자거나 자진사퇴시키자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국민 여론상 모두 단독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여당이 이날을 김부겸 후보자 인준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와 세 장관 거취를 연계시키는 야당의 명분을 꺾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당 안팎에서 높아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뺨기를 박았다.

이후 윤 원내대표가 김부겸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의 개의를 요청하러 오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세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결론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의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께 의장의 뜻을 즉각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사실상 여야 협상 전까지 일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정리’하라는 주문에 여당도 수긍한 것이라는 해석

이 나왔다.

결국 김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놓고 당청간에 교감의 이렇지며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태로 사태를 일단락지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박 후보자 사퇴 후 즉각 입장을 내고 재송부 기한인 내일(14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박 후보자 사퇴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도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박 후보자 본인의 사퇴로 나왔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만큼 대통령의 민심 수용이라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당대표와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박지원, 스가 총리 만나 “한일 이대로 안 된다”

일본 도쿄를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했다.

1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박 원장은 스가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일간의 현안 해결 의지를 전했다.

특히 박 원장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의 계기에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대면 회담을 거론하면서 “빨리 한일 정상회담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원장과 스가 총리의 만남은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이 스가 총리를 예방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당시 박 원장은 지난 만남에서 스가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하면서 ‘김대중·오부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의 미래 방향성을 담은 새 정상 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지난 11일 일본을 방문해 다카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이후 12일 오전에는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한·미·일 3국 정보수장 회의를 진행했다.

대선 양자대결서 이재명 35.5% vs 윤석열 45.7%

홍준표·안철수·유승민과 대결은 이재명이 모두 앞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약 10개월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자구도의 여야 대선주자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을 제외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야권 대선주자들은 이 지사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차기 지난 11~12일 이틀간 대선주

자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한 결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맞붙을 경우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5.7%,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0.2%포인트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연령별로는 윤 전 총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0세 이상에서 56.2%, 50대에서 50.5%로 과반을 넘는 반면 반면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0대에서 49.8%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윤 전 총장을 뽑겠다

는 응답이 대구·경북(57.8%), 서울(55.0%), 부산·울산·경남(53.0%)에서 높았다. 이 지사를 뽑겠다는 응답은 광주·전라(58.4%)에서 다수였다. 이 지사와 홍준표 의원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8.4%인 반면 홍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1%에 그쳐 11.3%포인트의 격차가 났다.

이 지사와 안철수 대표와의 양자 가상대결도 9.0%포인트로 격차가 비슷했다.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7.8%, 안 대표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8.8%로 집계됐다.

이 지사와 유승민 의원과의 양자 가상대결은 격차가 18.7%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이 지사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7.9%, 유 의원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9.2%였는데 부동층이 42.9%(없음 34.3%, 잘 모름 8.7%)로 다른 가상대결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2만8636명에게 접촉해 최종 1012명이 응답(응답률 3.5%)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뉴시스

안철수 “정부·여당 암호화페 시장 인식, 건달만도 못하다”

“시장 과열·불공정 방지...야바위 투기판 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암호화페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가장 급한 일 중 하나가 암호화페 시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 수장은 ‘세금은 받고 보호는 못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면서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금 정부 여당의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조한 코스닥 거품 사태 당시를 거론하며 “암호화페 시장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누가 장담할 수 있나. 시세 조작을 하며 선량한 투자자들은 폰지 사기극의 잠재적 피해자로 만드는 대형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야 하고, 이 제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

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양성화해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암호화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부동산 폭등에 절절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페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한 상황에서 선불리 과세를 하다면 시장 혼란은 볼 보듯 뻔하다”라면서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페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라며 “굳이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시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오기와 불통으로 꼭 막히고 이도저도 못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임기끝 복지부동에 들어간 관료집단이 손을 놓고 있다면 여당이라도 팔 걷고 나서서 시급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대통령은 내년이면 집에 가실 분이지만 민주당의 원동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문 대통령 퇴임한다고 국회의원 그만하고 민주당 간판 내릴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